

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

가.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

- (현행) 시행령은 ① 일회성 금융거래를 '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'*로 정의하고, ② 일회성 금융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 (한화 2,000만원, 외화 1만달러 상당)의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부과

* (예시) 무통장 송금, 외환송금 및 환전 등

○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법령상 정의와 관련,

- 시행령은 금융실명법 상 개념*을 차용하여 일회성 금융거래를 정의하였으나,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(여신, 보험 등)의 경우 계좌 개념이 모호하여 일회성 거래 구분이 불명확하여,
- 금융회사의 실무상 적용 혼선 및 금융 고객에 대한 불편 초래

*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실명을 확인토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생략

○ 일회성 금융거래의 고객확인 기준과 관련,

-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금액기준* (특히, 전신송금, 카지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)을 충족하지 못함

* ① 1,000달러 (약 100만원) 이상의 전신송금, ② 3,000달러 이상의 카지노거래, ③ 기타 미화 15,000달러 (약 1,500만원)를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규정

- (개정안) 국제기준과 해외입법례를 반영하여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개정하고, 고객확인의 대상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

○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,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 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

(적용 사례1)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2,000만원을 초과하는 외환송금, 환전 등의 일회적 금융거래를 할 경우

- ① (종전) i) 외환송금, 환전 등은 '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'이므로 기확인 고객을 중복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, ii) 외환송금, 환전이외에도 일회적 금융거래 형태가 다양하여, 해당 거래가 시행령 上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



- ② (개선방안)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일회적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**고객확인 이행 불요**

*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(특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)

(적용 사례2) 보험·신용카드사 등이 고객에게 대출을 시행한 이후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채무변제

- ① (종전) 제3자의 변제가 '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'인지 여부가 불분명



- ② (개선방안) 일회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**고객확인 대상***으로 명확화

* FATF 국제기준이나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고객확인대상

○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 형태를 세분화하고, 기준금액을 강화

〈현행〉

-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
- 그 외에는 2천만원



〈개정안〉

- ① 전신송금: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
- ② 카지노: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
- ③ 외화표시 외국환거래: 10,000달러
- ④ 기타: 1,500만원

나.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

- (현행)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*에 대해 AML·CFT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 규정은 부재

*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,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함 (상법 §342의2)

※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·CFT를 부과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음

- **(개정안)**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적용을 명시

다. 고액현금거래보고 (CTR)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

- **(현행)** 공공단체*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CTR 의무를 면제
 - * 공공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지방공사 등
-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보고대상 거래와 면제대상 거래를 구분하도록 하여 오히려 실무상 불편함을 가중
- 공공단체의 경우도 자금세탁 위험성*이 있으므로 보고대상에 제외 규정을 포함을 재검토
 - * (예시) 공공기관 직원이 회사돈 수표 20억을 횡령하고,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한 사건 발생 ('14년)
- **(개정안)**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CTR 의무 부과

라. 상호금융*에 대한 AML·CFT 검사권한 병행 위탁

*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 등 (새마을금고는 제외)

- **(현행)** 상호금융에 대한 AML·CFT 검사권한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위탁
 -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검사와 AML·CFT 검사 기관이 상이*
 - * 건전성 검사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병행검사(새마을금고 제외)를 실시하고 있으나, AML/CFT 관련 검사는 중앙회가 단독 검사
 - 금감원이 건전성 검사시 AML·CFT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등 검사 측면에서 비효율 발생
 -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설립목적* 상 검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
 - * 중앙회는 금감원, 관세청 등 他 검사 수탁기관과 달리 설립목적 상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
- **(개정안)** 상호금융(새마을금고 제외)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
 - 병행위탁에 따른 금감원과 중앙회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향후 내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(필요시 FIU 검사 및 제재규정 반영)

3 향후 추진일정

- ☐ 입법예고 (5.11일~6.26일, 45일간), 규제위·법제처 심사, 차관·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(일부 조항*은 6개월 유예)

*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,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·CFT 부과 등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